

선두 文, 반전모색 安, 탄핵돌풍 李… 호남 선택 주목

〈재인〉

〈철수〉

〈재명〉

긴급진단

빨라진 대선시계

광주·전남 표심 어디로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면서 야권 선택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는 그동안 대선에서 '개혁 세력'으로의 정권 교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개혁 정권이 결국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추구하는 '대의'의 정치권에 부합하고, 균형정책을 통해 지역에 실리를 줄 것이란 바람도 작용한 표심이었다.

하지만, 광주·전남 유권자 입장에서 최근 두 번의 대선 패배로 혼란스러워졌다.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국민의당을 제1당으로 만든 지난 20대 총선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대선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승리하더라도 호남정권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회의감을 가진 때문으로 해석됐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고려가 내년 대선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민주당 후보로 정권교체 가능?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에 '안방'을 내준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다시 호남 해게모니를 잡아 정권교체의 전조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는 야권에서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가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보고 있다. 더욱이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면서 현재 1위 후보가 가장 유리하다 게 정치권 안팎

문, 지지율 담보 돌파 관건

안, '제3지대' 파괴력 변수

이, 흑독 검증 넘을지 관심

의 분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치명적 약점은 표의 확장력에 대한 불신에 있다. 야권이 정국을 장악한 지난 2개월여 동안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20%대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 '문재인의 무난한 패배'를 예상하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이다. 이들은 '문재인 필패론'을 내세우며 호남의 민심을 얻는다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결국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낮은 지지율 탓에 아직은 호남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 3지대 호남의 선택 반나=개혁을 고리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연대할 경우 나타난 '제3지대'가 호남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주목된다.

우선 '대통령제 폐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개혁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제3지대'가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선 전 개혁이 시간상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지적도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있어 개헌정국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 비주류와 새누리당 내의 개혁 성향 세력이 이탈할 경우 제 3지대의 면적은 커질 수도 있다. 나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선택지도 제 3지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패권적이라 비판을 받아온 진노(진노무현)·진박(박근혜) 세력을 제외한 중도·개혁세력이 분칠 경우 호남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변수는 새누리당 친박계도 개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중도·개혁세력의 개헌 움직임을 퇴색

시켜 호남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돌풍' 어디까지 =탄핵정국에서 급상승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실시된 다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3위를 차지하며 문 전 대표를 위협하고 있다.

답답하고 분노가 극에 달했던 탄핵 가결 이전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의 마음을 잡는데 성공한 이 시장의 지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와 현재 심리 과정에서 이 시장이 국민의 심증을 깨우는 언행을 계속한다면

'신선감'을 무기로 선두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장이 이 같은 추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앞에는 기성 정치권의 견제와 언론의 혹독한 검증이라는 통과여과가 남아 있다. 만일 국정 운영능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에서 버텨내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위상이 떨어질 개연성은 상존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 개헌론 봇물

安 "개헌 필요"…孫, 폐해청산 역할

김부겸·김무성·정종섭 의원도 가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정농단 게이트'를 계기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매개로 대선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13일 오전 국회의 원회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축사에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승자독식 구조 때문에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권력쟁취를 위한 사생결단의 대결만 남았다"며 "다음 대선은 새로운 제도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학자 출신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위원회(약칭 개헌추진회)'에서 "한국에서는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끼리 경쟁을 하면 대통령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된다"며 "권력 배분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병폐를 현행 대통령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력구조는 내각제로, 정당은 다당제로 가서 정책을 타협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도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는 13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에서 특별강연에 나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손 전 대표는 문 전 대표 등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인사들을 겨냥해 사회변혁을 거부하는 '호헌파'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손 전 대표는 "87년 체제 속에 대선을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으로, '제2의 박근혜'가 나와도 좋다,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말"이라며 "호헌세력의 진면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지도부는 시간이 없다며 심지어 개헌론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공격까지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개헌론에 불이 붙으면 대권의 길이 멀어지니까 하는 말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등이 대거 집결했다.

특히 손 전 대표와 전략적 연대설이 나오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손 전 대표와 온도차가 있지만, 최근 새판짜기를 명분으로 한 '비문 공판'에서 서로에 대한 거리를 좁히며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개헌은 정략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우리 사회의 약속인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누리려는 욕심이 그 약속을 파기해왔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검, '정호성-최순실 단골 성형의사 접촉' 확인

靑과 연결고리 드러나…수사 급물살

국조특위,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추진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단골로 다닌 성형외과병원 원장 김영재씨 측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기소)과 긴밀히 접촉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

청와대가 나서 김씨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김씨 측과 청와대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특검팀의 '의료 농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전 비서관과 김씨 측이 박 대통령 취임 후 긴밀히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씨 측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사업 민원을 넣은 것으로 보고 이르면 내주께 정식 수사에 들어가면 정 전 비서관, 김씨 등 관련자를 소환해 접촉 배경 등을 캐물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중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씨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조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상당히 나오지 않으면서 '최순실이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에 있는 증인들은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조금 더 정역을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버틴 것"이라며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직접 교도소를 찾아가서 청문회를 개최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병계 의원은 이날 "최씨에 대해 구치소를 찾아가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